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 대책

조희봉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실장



머리말

국가 경제 및 시민 사회의 발전과 함께 원자력을 포함한 국가 주도 사업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향상되어 국민적인 신뢰 획득 및 동의를 기본 전제로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원전 운영에서도 사회적인 신뢰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은 최근의 영광 5, 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 및

영광 5호기 탈염수 계통 오염 사건으로 빚어진 영광 5·6호기 장기 정지 사례에서 쉽게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2003년 4월에 영광 5호기에서 열전달 완충판 이탈이 발견되면서 비롯된 동 사건은 2003년 12월에 영광 6호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되고, 영광 5호기 탈염수 계통 방사능 오염 문제와 맞물려 운전중인 원전 2기를 장기간 가동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사건의 발단은 기술적인 문제에서 발생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이 제3의 외국 기관인 독일 TÜV사 및 독일 응용생태 연구소에 현장 확인 및 안전성 조사를 요구함으로써 영광 5호기는 당초 공정보다 약 70일, 영광 6호기는 약 86일 동안 원전 가동이 지연됨으로써 경제적 손실과 함께 많은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다.

원전 운영 현황

1. 세계 원전 현황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는 31개국에서 434기가 상업 운전중에 있으며, 건설 33기, 계획 38기 등 총 71기가 새로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에 있고 전력 생산량의 약 16%를 담당하고 있다.

2. 국내 원전 운영 수준

국내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은 전체 설비(61,539MW)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비 규모면에서는 세계 6위이다.

2005년 상반기 원자력 발전 실적은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원전 운영 기술의 한 척도인 한주기 무고장 안전 운전(One Cycle Trouble Free Operation)은 2002년도 7건, 2003년도 4건,



原電 安全政策聲明

우리는 원전 운영에 따른 안전목표가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회사의 기업윤리강령에서 안전 최우선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원전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최상의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원전 안전정책성명을 제정하고 이를 원전 안전성 증진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 하**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의 기존 안전성 확인 기법과 더불어 최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상의 안전수준을 유지한다.
- 아**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가 조직문화에 깊이 관계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안전문화를 생활화한다.
- 하**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의 정미기술 향상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설비신뢰도를 제고한다.
- 하**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변 주민과 환경을 보호한다.
- 아**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안전성을 높이고 시공감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이 향상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
- 아**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전 안전 정책 성명 전문

2004년도에는 10기의 원전에서 OCTF를 달성함으로써 국내 원전 운영 기술도 우수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전 안전 관리 현황

1. 안전 관리 기본 방향

우리 회사의 원자력 안전 관리 기

본 방향은 정부의 원자력 안전 현장과 우리 회사 원전 안전 정책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궁극적인 안전 목표는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전하는 데 있으며, 기업 윤리 강령에서부터 원전 운영의 안전 관리 최우선 의지를 반영하였고, 원전 종사자로서 안전을 최우

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안전 우선 마인드를 전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전 안전 정책 성명에서 원전 안전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찌기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해서는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의 재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개발 초기부터 깊이 인식하여 타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 도입 과정에서부터 최상의 엄격한 안전 기준이나 입증된 기술 기준을 채택하여 원자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법 규정 범위를 벗어난 원자력 손해 배상, 방사선 재해 대책 등의 사항은 원자력손해배상법, 민방위기본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2. 원전의 안전성 확보

원자력 발전의 안전 개념이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심층 방호 개념, 다중 보호 설비,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특성(다중성, 독립성, 다양성, 견고성, 운전중 상시 감시 기능)은 국내 원전이 갖는 기본적인 안전 개념이다.

원전에 대해서는 건설 단계의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 건설 품질 보증 계획서 등의 심의 과정 및 가동 전의 사용전 검사, 품질 보증 활

동 등에서부터 정부의 안전 검사를 통해 시공된 시설이 당초 허가된 기준을 부합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심층 방호 개념은 원전의 건설 및 운영 각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설계 단계에서 가장 명확히 적용된다.

심층 방어 개념이란 먼저 이상 상태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되, 이상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의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며, 만일 이상 상태가 확대되어 큰 사고로 진전되었을 때에는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주민을 보호하도록 사고의 진전 단계마다 적절한 방어 체계를 갖춘 것을 말한다.

3. 가동중 원전의 안전 대책

가동중 안전 대책은 설계 수명 동안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감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전의 운영 허가 취득시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안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원전이 안전하게 관계 법령과 기술 기준에 입각하여 운영되는지를 정기 검사, 수시 검사, 일상 검사, 가동중 검사 등을 통해 다양하게 검사 및 확인하고 있다.

TMI 사고 및 체르노빌 사고로 원래의 설계 안전 목표와 더불어 경험과 기술을 반영한 종합적인 재평

가 개념이 국제적으로 도입되었고, 국내 원전에서도 원자력법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가동 원전을 대상으로 하여 10년 주기로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원전에 대해 실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상적인 사고를 가정하여 중대 사고(Severe Accident) 이행 대책을 수립 적용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만일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를 완화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또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SA : Probabilistic Safety Analysis)를 통해 이런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영향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 객관적 안전 점검 및 결과의 현장 피드백

원자력 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이나 자격 관리를 통해 능력을 갖춘 인력이 원전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전 안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발전소 원자력안전위원회, 본사 원자력발전안전위원회 등의 다각적인 검토와 재확인 절차 등을 통해 심의 결정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 안전 의식 제고를 위

한 다양한 제도와 제반 활동을 장려하며 관행 개선, 안전 문화 증진을 원전의 안전 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 규제 기관에 의한 안전 심사 및 검사와는 별도로 원전은 다양한 자체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며, 이는 일정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점검과 더불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원전의 모든 계통과 기기가 당초 설계한 기술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품질 보증 부서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정기적으로 품질 보증 계획의 유효성과 이행 상태를 검사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원전은 해외 전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점검단(IAEA Operational Safety Review Team) 및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안전점검단(WANO Peer Review Team)을 초청하여 객관적이고 국제적 기준 적용을 통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또 매년 미국원자력발전협회 교차 기술 지원(INPO Technical Exchange Visit) 등을 통하여 세계 선진 원전과의 기술 교류 및 원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점검 및 기술 교류 결과는 해당 원전뿐만 아니라 국내 타원전에도 피드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원전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국제 안전 점검 실적을 보면 국제



〈표 1〉 국내 원전 호기당 평균 피폭 선량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년 평균
국내 원전	0.71	0.67	0.55	0.57	0.69	0.64

주) 세계원전 PWR 5년간 평균 피폭 선량 : 0.90mSv/호기

〈표 2〉 국내 원전 개인별 평균 피폭 선량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년 평균
국내 원전	1.41	1.29	1.12	1.18	1.42	1.26

주) 국내 원전 개인별 피폭 선량 법적 제한치 : 50mSv

원자력기구 안전 점검¹⁾(IAEA OSART)은 1983년부터 5차례,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안전 점검²⁾(WANO Peer Review)은 1997년부터 3차례 실시된 바 있으며, WANO 안전 점검은 고리 3·4호기를 대상으로 금년 10월에, IAEA OSART 점검은 2007년도 전반기에 영광 5·6호기를 대상으로 차기 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지난 5년간 방사선 안전 관리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1〉을 보면 국내 원전 호기당 5년간 평균 피폭 선량은 세계 원전 경수로 원전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 〈표 2〉에서도 국내 원전 호기당 개인별 피폭 선량 또한 법적 제한치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및 비상 발령 기준, 사고 초기의 비상 조치, 주민 보호 조치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체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환경 방사선 영향 평가를 통해 원전 지역 주변의 환경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 감시하고 있으며, 원전 주변의 환경 방사선량은 부지별로 10~11개 ERMS(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System) 설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원전 주변의 환경 방사선 영향 평가 및 조사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원전 지역 주변에 소재한 대학에서 환경 시료 채취와 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와 문제

원전은 건설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원전 운영 중에도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나 원전 지역 주민들이 갖는 원전에 대한 체감 안전 지수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다(참조 : 원자력 안전과 규제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KINS의 2003. 4월 정책 연구 결과)

5. 철저한 방사선 안전 관리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발생 최소화 및 방사선 피폭의 최대한 억제를 위해 원전은 설계, 건설 단계부터 방사선 안전에 대해 세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방호 원칙에 입각한 방사선 안전 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립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안전 관리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6. 원전 방사능 방재 대책 및 환경 방사선 관리

원전은 다양한 안전 설비와 다중의 방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주변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비상 사태로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일의 방사선 사고에 대비해서 원자력 시설은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전 부지별로 방사선 방사선 비상 계획서 및 관련 비상 절차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 방재 합동 훈련 등을 통해 비상 대응 조직과 임무, 비상

1) IAEA OSART : 고리 1호기(1983년), 고리 3·4호기(1986년), 영광 1·2호기(1997년), 월성 1호기(1989년), 울진 1·2호기(1994년)
 2) WANO Peer Review : 월성 1호기(1997년), 영광 3·4호기(2001년), 울진 3·4호기(2004년)

1.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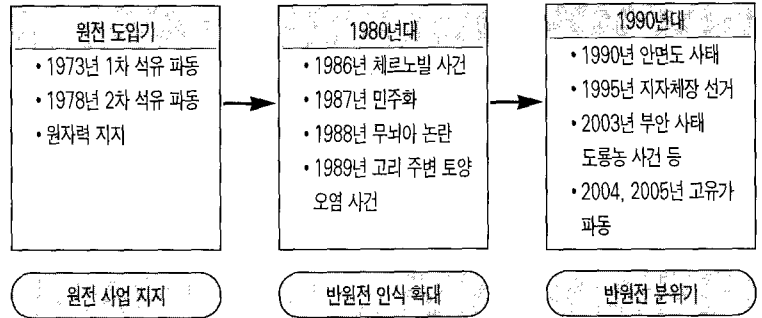
과거 원자력이 도입될 당시 1970년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제1, 2차 오일 쇼크를 통해 원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었으며, 원자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원자력계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원전 건설 및 원전 운영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후 두 차례의 대형 원전 사고(1979년 TMI 2호기 원전 사고, 1986년 체르노빌 4호기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은 원자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 물결과 함께 반원전 관련 언론 보도가 빈번하게 등장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8년의 무늬아 사건 보도 등을 통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고리 원전 주변 토양 오염 사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확보와 관련한 안면도 사건, 굴업도 활성 단층 발견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둘러싼 부안 소요 사태는 정부 및 원자력 운영 주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



(그림 1) 원전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으며, 이로 말미암아 원전의 안전성마저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형성 하였다.

2.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 원인 분석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는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환경이나 안전에 관한 사회적 기대 수준 향상, 지방자치제 도입 후 빈번한 원전의 지역 문제화, 일부 부분별한 언론 보도 등이 작용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원전이 국민의 이해 기반이나 정보 수용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학적 안전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국민 설득에 실패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편, 원자력을 비판하는 환경단체나 반핵 단체는 방사선 영향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원전에서 사소한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이를 확대 해석하여 국민에게 과장되게 설명함으로써 원전이 마치 구조적인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원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 및 불신을 조장한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원전이 주변 지역 주민이 갖

고 있던 경제적 혜택이나 경제적 대치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원전 운영 주체에 대해 지역 주민부터 불신을 받기 시작하였고, 원전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나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불거진 집단 시위 및 잦은 언론 보도가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원인을 지적하기도 한다.

3. 사회적 인식 및 장애 요인

일반 국민이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나 통계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 환경 변화 및 사회심리학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원전에 대한 낮은 체감 안전 지수는 원전의 공학적인 안전도와 무관하게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떨어뜨린다.

원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영광 5·6호기 사건과 같이 장기간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재발될 수 있으며, 결국



〈표 3〉 지역 공동체 경영 및 사회 공헌 추진(중장기 계획)

구분	1단계(단기)	2단계(중기)	3단계(장기)
시기	2004~2005년 (2년)	2006~2008년 (3년)	2009년 이후
목표	지역 공동체 경영 기반 구축	주변 지역 활성화	지역 사회 수용성 정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기반 구축 • 지역 일체감 조성 • 지역 경제를 위한 • 재원 확보 노력 • 지역 사회 공헌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전략 이행 • 지역 개발 지원 • 지역 사회 공헌 활동 등 	지역 개발 지원 및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한 일체감 조성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로 되돌아
올 것이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전 안전
에 대한 사회적 신뢰 문제는 성격상
사회심리적인 변화에서부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며, 원자력 사업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원전의 사회적 신뢰 문제
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 회사가 추진
하고자 하는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
국민, 원자력 관계 기관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

1. 원전 안전성 제고

국민 신뢰 획득을 위한 최우선 과
제는 원전의 설비 신뢰도 향상을 포
함한 원전의 안전성 제고라는 점에
서 재론할 필요가 없겠다.

고장 정지 감소, 인적 실수 방지
를 통한 불시 정지 예방 등은 원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체감 안전 지수
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
다.

또한 철저한 방사선 관리를 통해
방사선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부터 국민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원전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
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유용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함
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 지역 사회 발전 기여를 통한
원전 수용성 제고**

우리 회사는 원자력 사업의 근간
인 지역 사회 발전의 기여를 통해
원전 주변 지역부터 원전에 대한 신
뢰를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원전 수
용성 제고를 최대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는 최고 경영
자의 경영 방침하에 지역 공동체 경
영을 4대 경영 방침의 하나로 설정
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우리 회사도
발전한다는 공존 공영의 경영 전략

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05년도에는 지역 공동체 경영
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및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을 경
주하였다.

2006년부터는 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하에 지역 공동체
경영은 본격적으로 이행되어 나갈
것이다.

우리 회사의 지역 공동체 경영 및
사회 공헌 중장기 추진 계획은 〈표
3〉에서와 같이 2009년 이후에는지
역 사회와 원전이 일체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의 경쟁력을 확보함
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대국민 원전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개
정의 주요 내용은 원전 주변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합함으로
써 탄력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
록 정비하였다.

또한 그 동안 지역 불만 사항이던
원전 가동년수 경과에 따라 지역 지
원금 산정 기준이 단계별로 감소하
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량
을 근거로 하는 지역 지원금 산정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법률 개정에는 원전 사
업자(수력 포함)가 자기 자금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직접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목
할 필요가 있겠다.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의

주변 지역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금 외에 원전 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지역 주민의 불만 사항이던 원전으로부터의 경제적 혜택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원전의 기여 문제는 크게 해소되리라 본다.

3. 원전 운영 관련 정보의 공개 투명성 제고

원자력 이용 시설의 사고 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 규정 개정으로 원전 정보 공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었다.

철저한 보고 규정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국민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전 운영 정보는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전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4.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권역별·계층별 맞춤 홍보 및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 정부, 언론사, 환경 단체 등과 원전에 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원전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원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사건 후 처리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원전 운영 주체에 대한 신뢰

〈표 4〉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현황

지원 사업 통합 및 신설	- 전기 요금 보조, 주민 복지,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을 기본 지원 사업에 통합 - 기본 지원 사업 내용에 사회 복지 사업 추가
발전량 근거로 지원금 산정	기동년수 경과에 따른 지원금 축소 문제점 해소 개선
사업자 부담 지원 사업	원전 사업자(수력 포함)는 자기 자금으로 지원 사업 시행 가능 - 재원 규모 및 사업 종류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주변 지역 외 지원	주변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사용 규정 구체화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5. 과학적·통계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 사실 비교에 노력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이나 통계 자료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타산업이나 타전원과의 비교 데이터 작성을 통해 원전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6. 지역 주민 체험 기회 및 채용 확대

지역 주민이 원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원전과 지역 주민은 공존 공영한다는 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부터 원전 수용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이는 사소한 문제까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거나 실제적 합일을 이루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겠다.

우리 회사는 원전 안전 운영의 최종책임자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의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며, 원전 운영 관련 보고 규정의 철저한 준수, 적극적인 정보 공개 및 지역 주민과의 밀착 홍보,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원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특히 앞으로 원전과 지역 주민이 공존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공동체 경영 및 사회 공헌 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획득은 성격상 원자력 사업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정부, 학계, 규제 전문 기관 등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결 언

원자력에 대한 종사자의 공학적 안전도와 사회적 체감 안전도의 차